다산포럼

민병욱

언론은 신뢰를 먹고 산다는데

초년기자 시절, 화재현장에서 취재 중 주민들의 박수를 받는 특이한 경험을 했다. 1970년대 중반의 일이다. 영등포 변두리 한 악기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신문사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불길은 금방이라도 공장 옆 판자촌으로 옮겨 붙을 기세였다. 그런데도 소방도로가 정비돼 있지 않아 큰 소방차는 아예 공장에 접근도 못 하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먼 데서 끌어온 호스로, 또 주민들은 버킷이나 바가지 등으로 물을 날라 연신 뿌려 대는 중이었다. 이래서야 언제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 안타까운 상황. 사람들이 박수를 칠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난데없는 박수에 기자가 어색해 하며 차에서 내리자 이번엔 사람들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제각기 현장상황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기자가 둘러보니 그런 주민들 주변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끼여 있는 것 아닌가. 아마 그 기자들에겐 주민들이 상황설명을 해주지 않은 모양이었다. 왜 그랬을까.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는 제쳐두고 한참 늦게야 현장에 온 특정 신문사 기자에게 몰려들어 박수까지 치며 취재에 협조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했지만 당장 취재가 급했지 그걸 물어볼 형편은 아니었다.

신문사에 돌아와 그 일을 설명하자 사회부장이 간단하게 답을 내놓았다. "우리 신문을 믿기 때문이야." 한 선배기자는 거기 덧붙여 "우리가 시민 편에서 기사를 쓰는 걸 알고 박수친 거야"라고 했다. 당시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언론에 단단히 재갈을 물렸던 시절. 써야 마땅한데도 못 쓰는 기사, 아예 보도금지 딱지가 붙거나 몇 단 이상은 쓸 수 없게 조치한 기사들이 부지기수였다. 그처럼 보도가 부실한데도 우리 신문을 믿는다니. 시민 편에서 기사를 쓴 걸 믿는다니. 초년 기자로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

사실 지금도 그때 주민들의 박수와 배타적 취재협조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기자가 소속했던 회사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독자들의 신뢰를 훨씬 많이 받고 있었고 꼭 써야할 기사를 못 쓰는 것도 비난하기보다 동정했다는 걸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정부나 있는 자의 편이 아닌 없는 사람, 서민의 편에서 기사를 쓰려 애썼기 때문이었다. 그때의 판자촌 주민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 신문사의 기자가 오자 반가운 마음에서, 또 판자촌 서민인 자기들 편에서 기사를 써달라는 호소의 심정으로 박수를 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 논에 물대기 해석인지 모르나 당시 기자가 속한 신문사에는 잠시 앉아 쉴 새도 없이 시민들의 제보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어떤 때는 신문에 오자 탈자가 생기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했는데도 일부러 뭔가를 암시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해오기도 했다. 우스갯소리로 백지에 제호만 찍어도 다른 신문보다 몇 배는 더 나갈 거라는 등 독자의 끝없는 신뢰를 바탕 삼아 신문을 만들었다.

아침마다 오는 신문들을 보며 지금 시민 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드는 신문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본다. 특정 정파나 이념에 편승한 신문, 정부나 광고주의 입장에 충실한 신문, 되지도 않는 훈계로 시민들을 역겹게 하는 신문 등은 금방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진정 시민의 편으로, 시민의 아픈 데를 감싸주며 억울한 곳을 밝혀주는 신문은 "이거다"며 찍기가 쉽지 않다. 30년 기자를 하고 신문사를 떠난 지 5년이 넘었지만 박수받는 기자 이미지는 머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민초포럼 대표·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화해와 통합의 국정 운영 기대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이후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디어법 강행 통과이후 극한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했던 정치권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화해와 용서를 몸소 실천했던 김 전 대통령의 생애가 재조명되면서 고조됐던 국민 화합분위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치권, 특히 여권의 노력이 요구된다.

조만간 단행될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화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번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에도 편중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중도실용을 강조하면서 국정전환을 꾀하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연을 넘어서야 한다. 특정 학교나 종교,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인사들만 기용하는 편협한 인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도 고려해야 한다. 인사검증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4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화합과 통합을 국정운영의 중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 개편과 개각에서 화합형 인사가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화해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전제하면서 "화합과 통합이 우리 시대정신이며 지역과 계층, 이념을 넘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모처럼 조성된 국민 화합,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민들은 고른 인재 등용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탕평인사와 균형개발은 화해와 통합의 국정 운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김 전 대통령의 유지(遺志)를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다.

신종플루 국가재난 차원 대책 수립해야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하루 신종 플루 감염자가 188명이나 발생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신종플루 환자는 3천113명으로 늘었다. 지난 15일 환자 수가 2천명을 넘어선지 9일만에 3천명 선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의 확산 속도도 예사롭지가 않다. 지역 신종 플루 확진 환자는 지난 21일 하루 사이 24명이나 늘어나는 등 23일 현재 79명에 달한다.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철로 접어들면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져 감염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각급 학교의 개학시기, 각종 국제행사 등과 맞물려 신종플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 신종 플루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4개월 안에 감염 환자가 8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예측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대비는 매우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신종 플루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와 예방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다.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전체 인구의 11%인 531만명분 정도가 비축돼 있을 뿐이다. 신종 플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치료제 부족으로 걷잡을 수 없는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신종 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국가재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신종 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조속히 국가재난대책본부를 출범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신종 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종 플루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국민들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 등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민·관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다.

NGO 칼럼

정병문

대한민국의 희망 '인동초 정신'

인동초가 지고 난 자리에 국화꽃이 산을 이뤘다. 한숨과 흐느낌에 하늘도 숨을 죽이고 애도의 물결은 흐르는 강이 되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이 나라와 국민의 앞날을 위해 그토록 걱정해온 이가 또 누가 있었던가! 이제 그가 떠난 그 큰 빈자리에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유훈 만이 남았다.

당시의 상황을 반추하면 국가적으로 IMF라는 힘겨운 경제상황에 있었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며 소외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자 했던 국민의 정부와 그 이념,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참여정부를 지나 우리는 지금 '실용주의'와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는 새 정부를 맞고 있다.

시작부터 새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서둘렀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축소와 함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계법'을 국회법과 의회정신을 무시한 채 강행 처리했다. 더욱이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도입키로 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있어, 직접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나 명확한 산출근거조차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처리하려 하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조차 서질 않는다.

MB정부가 표방하는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그러한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수십 가지의 국정과제와 목표가 무슨 소용이며 누가 신뢰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제,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그 큰 빈자리에 인동초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리고 차별과 억압, 박해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굵은 눈물을 떨구던 두 분의 큰 바위 얼굴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인동초 씨앗이 움터 가지를 뻗고 우거져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지켜내는 강한 동력이 되도록 키워가야만 한다. 그가 떠나며 남긴 한마디처럼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은 이제 인동초의 정신, 행동하는 양심만이 해법인 셈이다.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기고

박만호

행복마을 '한옥 민박' 대박난다

전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박준영 전남도지사님이 지난 2007년부터 도정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현재 53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회생사업으로, 지역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전남도만의 독특한 사업이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7월 23일부터 행복마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현재 일부 한옥 신축이 되고 있는 12개 마을의 한옥 73동에 대해 민박을 하도록 했는데, 약 3주일 동안 홈페이지 접속자만 3만여명이었으며, 민박 수입금은 2천5백만원이 넘어섰다.

특히 해남군 매정마을의 경우는 한옥 10동의 민박 수입금이 6백만 원이 넘어서는 등 한옥민박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 박준영 도지사가 "한옥의 방 한 칸은 민박용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한옥농가의 소득원 창출에 큰 효자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행복마을이란 날로 피폐해 가고 있는 농어촌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민들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게 하는 마을을 말한다.

특히 주택은 한옥으로만 건립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주민소득 증대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복마을에 한옥만 건립도록 하는 이유는 사람의 건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전통 주거문화를 살려 이를 관광자원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기본 틀을 잡아감에 따라 농촌 마을 가꾸기 사업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행복마을은 농어촌의 희망일 뿐 아니라, 도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담당국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으로 도내 몇 곳의 행복마을을 둘러보면서 목재, 황토 등 친환경 자재로 지은 한옥의 아름다움과 고고함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였으며, 특히 새로 지은 한옥들은 마을 주변의 아름드리 수목과 깨끗한 하천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했다.

이뿐이랴! 동네 곳곳의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상치, 열무, 고추, 가지, 오이 등은 시골의 풍성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어르신들이 애써 재배한 고추며 오이 등을 먹을 만큼 따 가라는 풋풋한 인심은 지금도 예전처럼 여전하였다. 이래서 행복마을의 한옥민박이 인기가 높은 것 같다.

요즘 도시의 안정된 연금소득자들은 각박한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와 인심 좋은 시골의 전원마을에서 살기를 선호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의 전원생활을 꿈꾸며 전남의 행복마을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해당 마을의 대표자나 해당 시·군에 얘기하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이다.

농어촌은 도시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어촌은 서로 공생발전 하여야 하며, 그 하나의 방편으로 많은 도시민이 행복마을의 한옥민박을 찾아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기회를 자주 갖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행복마을 관계자들께서는 마을환경을 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민박가옥의 청결을 유지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無等鼓

지석(誌石)

지난 2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되면서 고인의 지석(誌石)도 함께 묻혔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일, 죽은 날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세덕(世德), 사적(事蹟), 자손 등을 글자로 새겨 무덤 앞에 묻는 판석이다. 한마디로 지석은 이승의 축소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석 또한 그의 일대기를 축약하고 있다. 성장과정과 정치역정, 15대 대통령 취임과 6·15 남북정상회담, 퇴임 후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 등이 상세하게 기록됐다.

김 전 대통령의 지석은 '公의 성은 金氏, 본관은 金海, 휘는 大中, 호는 後廣이다. 1924년 1월6일(양력)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에서 아버지 김운식, 어머니 장수금의 차남으로 태어났다'로 시작된다. 또 하의도 보통학교를 다닐 때부터 부모님이 고인의 영특함을 살리기 위해 목포로 이사한 것과, 목포 상업학교 졸업 후 유망 청년 사업가가 돼 가정을 꾸린 사실도 쓰여 있다.

정계 입문 후 우여곡절 끝에 1970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뽑혔으나 이듬해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일 등 정치역정도 소상하게 나열됐다. 1997년 제 1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00년 6월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그해 12월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 등 굵직한 업적이 소개됐다.

2009년 8월18일 오후 1시43분 86세를 일기로 서거했고 퇴임한 국가 원수로는 처음 국장으로 모셔졌으며 수많은 학위와 저서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지석은 봉분이 무너져서 분묘를 잃을까 염려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다, 하지만 봉분을 잃을 일이 많지 않아 지석은 주인이 어떠한 생을 살아왔는가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게 더 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자신의 지석이 만들어 진다면 어떤 내용이 새겨질 것인가를 새겨볼 일이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시민 위협하는 '거리 입간판' 안전관리 신경써야

시내에 나가보면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돌출 간판, 쓰러지고 흔들거리는 옥상 조형물, 거리에 나뒹구는 각종 입간판 등 이러한 홍보물이 눈에 거슬린다. 이것들은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무방비 상태로 인도와 차도에서 차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한다.

게다가 안전성과 주변 경관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남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건물 외벽이 온통 간판으로 뒤덮여 아예 벽조차 보이지 않는 건물도 볼 수 있다. 허가관청은 각종 홍보물의 규격과 부착강도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광주도 이제는 매년 자연재해 횟수가 많아지고 피해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전국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늘 신경 써야 하는 게 각종 간판과 시설물 안전조치이다. 재난으로 인해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연실·광주시 동구 산수동

'공용 주차장' 인근 업소 횡포 강력 단속을

갈수록 광주에도 차가 늘어나 주차난이 심각하다. 운전자들은 대개 집 근처에 주차공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자리가 없으면 한적한 길거리나 노상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런 데도 말만 공용이지 사실은 개인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어 이용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주차구획을 그어 놓은 곳은 분명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인근 식당이나 기타 영업점이 있는 경우 그 주차장을 영업점의 개인주차장처럼 제멋대로 이용된다.

일부 영업점은 아예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만들어 세워놓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놔 일반주차는 엄두도 못 내게 한다.

업소들의 이 같은 횡포를 단속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용주차장이 업소들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행정관청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아울러 주택가든 시내 일반 공간이든 주차구역을 좀더 넓혀주는 행정을 바란다. 이제 승용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필수품인 시대이니까.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초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